

[2010 가계부채②]

2003 신용카드 부실 폭발의 교훈

2010.2.24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기록들
2. 때 늦은 정부규제가 오히려 부실을 폭발시키다.
3. 카드 대란의 시작, 연체율의 수직 상승
4. 370만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의 가계 파산
5. 무분별한 영업, 신용카드사 부실로 되돌아오다.
6.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는 금융위기의 예선전?



<http://saesayon.org>

요약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의 역전/ 신용카드 1억 장 시대 도래/ 신용카드 대출 6배 팽창/ 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10명 중 7명이 다중 채무자. 이상이 신용카드 부실이 터졌던 2002~2003년에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한국경제가 세운 기록들이다.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한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던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얼마나 광적인 신용카드사들의 대출 경쟁으로 발생했는지를 생생하게 말해준다.

정부의 뒤늦은 감독과 규제 대책은 오히려 신용카드 부실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불법 카드 영업을 단속하는 수준의 감독을 시작한 2001년 말에는 이미 신용카드도 8천만 장 이상 발급되었고 신용카드 대출 역시 잔액 기준으로 50조 이상이 풀려나간 뒤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 대출도 역사상 최초로 300조 원이 넘어갔다.

2001년 연말까지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2.6퍼센트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신용카드 산업의 연체율 수준보다 오히려 더 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1년 뒤인 2002년 말에 6.6퍼센트로 3배가 뛰어 올랐고 다시 1년이 지난 2003년에는 14퍼센트라고 하는 기록적인 연체율을 보이면서 카드 대란의 정점을 알린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이 순식간에 늘어난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말까지 짧은 기간에 신용 불량자가 추가로 15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2003년 1년 동안에만 120만 명이 늘어나 372만 신용 불량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자본 건전성 확충으로 영업이 위축되었음은 물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채권 회수가 안 되는 동시에, 2003년부터 자본시장에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가 전혀 소화가 되지 않자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부실이 표면화된다. 그 정점에 당시 업계 1위의 엘지 카드사가 있었다.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예선전이 아니라 본선 게임이다. 은행과 연관된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실, 그리고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가계 부채의 문제가 자라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만큼 쉽게 터지지는 않겠지만 심각성 정도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문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기록들

▶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의 역전** : 2001년 9월 기준으로 금융회사 전체의 가계 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는다. 특히 2003년 말 기준으로는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비중이 60퍼센트를 넘게 된다. 금융회사들의 주요 고객, 주요 대출 대상이 기업에서 가계로 넘어오는 순간이다. 2000년대 이후 금융회사들의 표현대로 ‘소매금융의 시대’가 온 것이다.

▶ **신용카드 1억 장 시대 도래** :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2002년 말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1억 장을 돌파하고 카드 회원 수는 8700만을 돌파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지갑에 신용카드를 평균 4.6매 정도 넣고 다녔다는 얘기가 된다.

▶ **신용카드 대출 6배 팽창** : 까다로운 은행대출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 장으로 간단히 인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으로 받은 신용카드 대출이 1998년 10조 원 수준에서 4년 만인 2002년 하반기에 무려 60조 원까지 6배까지 늘어난다.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신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대출 도구가 된 것이다.

▶ **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 : 당시에는 경제적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던 신용불량자가 2003년 말 기준으로 372만 명에 이른다. 경제활동 인구 6명 가운데 1명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신용카드 때문이었다. 372만 전체 신용 불량자 가운데 240만 명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였다.

▶ **신용불량자 10명 중 7명이 다중 채무자** : 2003년 말 현재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신용불량에 걸린 사람은 전체 신용 불량자의 71퍼센트나 되었다. 10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다중 채무자도 10퍼센트나 되었다. 카드 돌려막기가 횡행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이상이 신용카드 부실이 터졌던 2002~2003년에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한국경제가 세운 기록들이다.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한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던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얼마나 광적인 신용카드사들의 대출 경쟁으로 발생했는지를 생생하게 말해준다. 그 신용카드 대란 위기의 한 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참여정부가 출범한다.

때늦은 정부 규제가 오히려 부실폭발의 기폭제가 되다.

신용카드 시장의 규제를 풀고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해왔던 정부였지만 2001년부터 신용카드사의 과열 경쟁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도적 통제를 한 것은 아니었고 주로 무분별한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수준이었다.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이라든지, 미성년자 카드 발급시 부모 동의라든지, 길거리 영업 금지나 불법적인 카드 모집인 통제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부실 문제가 표면화되던 2002년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다시 규제하고, 신용카드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과잉 차입하면서 부실해진 자본 건전성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특히 신용카드 부실의 뇌관이 되었던 신용카드 대출(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의 비중이 200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사 대출의 63퍼센트까지 커지자 이를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신용카드 회사의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사 자본 건전성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

신용카드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규제조치

	주요 정책	주요 내용
2001.12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 소득확인 의무화 - 미성년자 카드 발급시 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2002.2	길거리 모집 금지	- 불법적 길거리 회원 모집 행위 금지
	은행 가계대출 기준 강화	- 카드 모집인 등록 의무화 - 가계 대출 대손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2002.3	불법 카드 발급 제재	- 무자격자에 대해 카드 발급을 남발한 3개 카드회사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업무 정지
2002.5	신용카드 종합대책	- 카드 수수료 인하유도
		- 부당 회원모집행위 금지 - 결제능력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 - 신용카드사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의 50%로 제한
2002.10	부동산 과열 대책	- 주택담보비율을 주택가격의 60%로 강화
2003.1	자본건전성 강화	- 신용카드사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부실채권 조기 상각유도
* 한국금융연구원, “신용 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5쪽 자료 재구성		

그러나 정부의 뒤 늦은 감독과 규제 대책은 오히려 신용카드 부실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불법 카드 영업을 단속하는 수준의 감독을 시작한 2001년 말에는 이미 신용카드도 8천만 장 이상 발급되었고 신용카드 대출 역시 잔액 기준으로 50조 이상이 풀려나간 뒤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 대출도 역사상 최초로 300조 원이 넘어갔다.

이미 폭발 직전까지 도달한 신용카드 시장을 앞에 두고, 신용 공급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 취한 대출 규제와 자본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는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급격한 대출 억제를 하도록 했고, 늘어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몰린 대출자들은 더 이상 신용카드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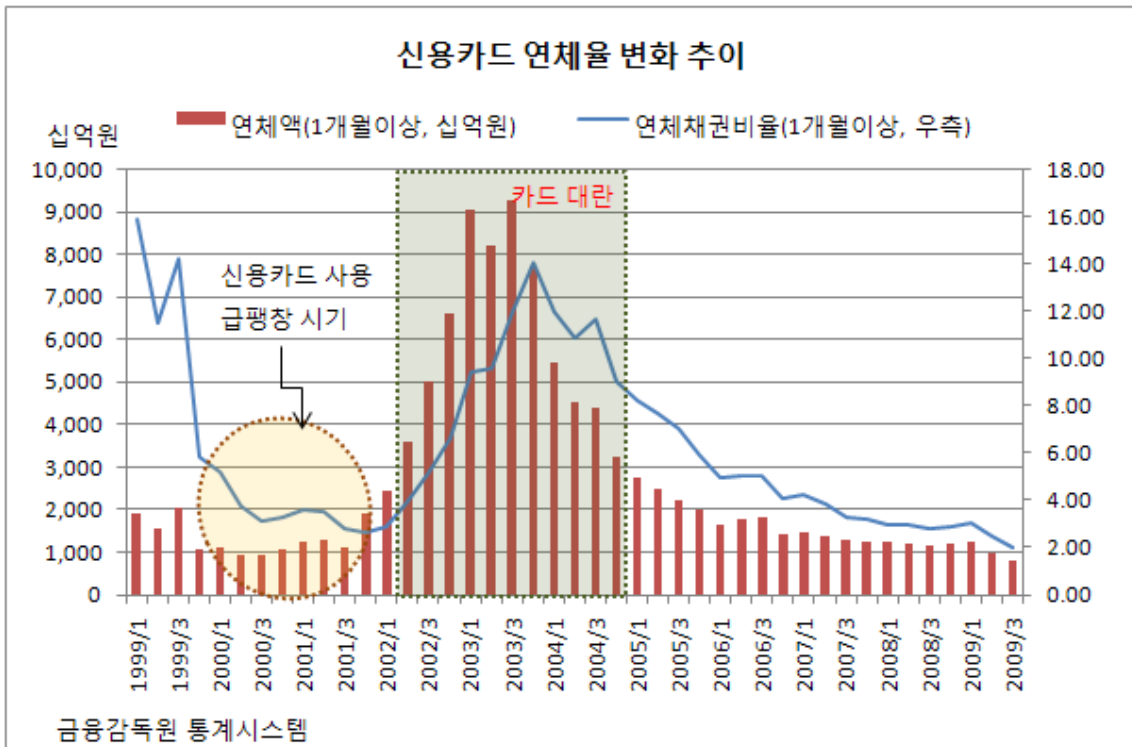
규제완화 -> 신용카드사 과잉 대출과 부실 위험 축적 ->정부의 건전성 규제 도입 -> 대출 억제 -> 부실 위험의 폭발이라는 도식이 작동하면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용대란이 현재화되었고 2003년 말까지 확산일로를 걷게 된다. 사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장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미국 역시 2005년까지의 저금리 상황에서 엄청난 모기지 대출이 풀려나가고 각종 위험한 대출 행위들이 성행하다가 뒤늦게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등 감독 조치를 취하면서 2006년 말을 분기점으로 부실이 폭발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그렇게 축적되어온 부실은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된다.

카드 대란의 시작, 연체율의 수직 상승

신용카드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하자 그 동안 양호했던 모든 지표들에서 순식간에 경고등이 켜진다. 우선 부실 상태를 직접 알려주는 연체율이 수직상승한다. 부실 폭발 직전인 2001년 연말까지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2.6퍼센트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신용카드 산업의 연체율 수준보다 오히려 더 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1년 뒤인 2002년 말에 6.6퍼센트로 3배가 뛰어 올랐고 다시 1년이 지난 2003년에는 14퍼센트라고 하는 기록적인 연체율을 보이면서 카드 대란의 정점을 알린다.(그림 참조)

물론 그 때에도 신용카드 뿐 아니라 예금은행들의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은행들의 연체율은 1.5~2.5퍼센트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였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 기록했던 연체율 7.1퍼센트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신용카드 대란 당시 은행도 주택담보 대출을 급팽창시켰지만 위험 축적의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었고 아직 표면화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2005~2006년에 또 한 차례 급증하는 등 2000년대 10년 내내 축

적되게 된다. (참고로 2010년 2월 현재 예금은행의 연체율은 0.5~1.0퍼센트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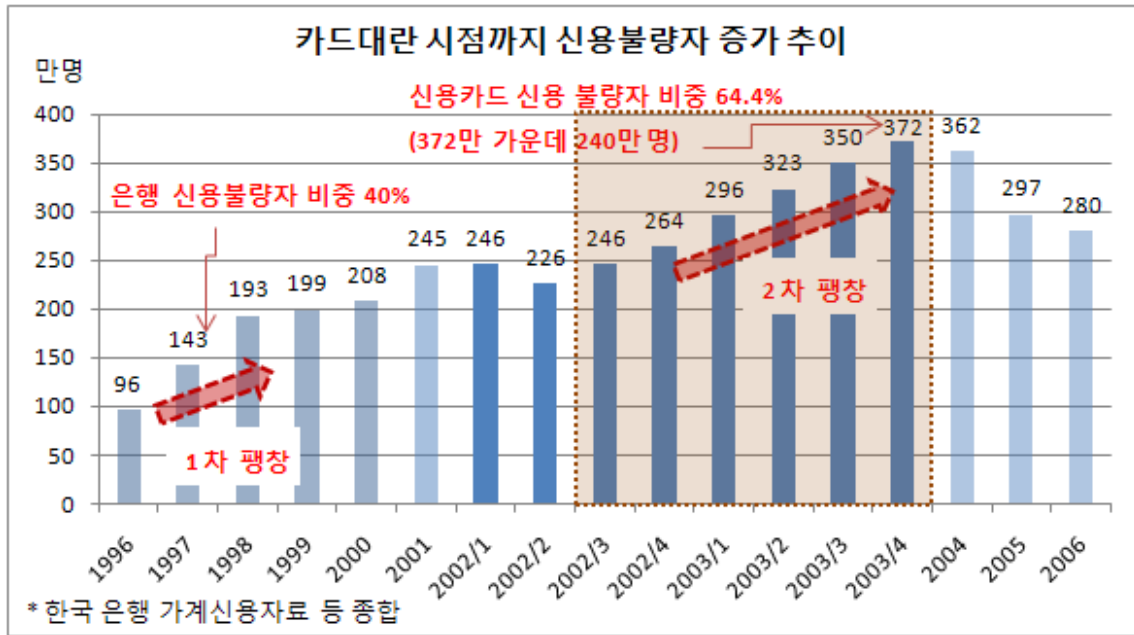
정부의 신용카드 영업과 신용카드사 자본 건전성 규제를 뒤따르면서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게 된 것인데, 다시 이 뒤를 따라 대출을 받은 가계가 파산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뒤에, 대출을 해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적자와 파산이 발생하게 된다.

370만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의 가계 파산

신용카드 대란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대규모 ‘신용 불량자’의 양산이었다.¹⁾ 평범한 생활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신용카드사용이나 금융권 대출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핸드폰 등의 신용구매도 불가능하고, 신원보증보험 가입도 힘들어 취직을 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심하게 표현하여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가장인 경우에는 사실상 가계 파산을 의미한다.(법원에 의한 법률적인 가계 파산은 파산 제도가 영성해 당시 신청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란 시기에도 한 해에 1천여 건에 불과했다.)

1) 신용불량자는 2000년까지는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이었으나, 2001년 초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나중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

이 같은 신용 불량자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100만 명을 밑도는 선에서 존재했다. 외환위기는 신용불량자의 수자도 2배로 올려놓았는데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신용불량자는 200~24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물론 신용카드 관련 신용 불량자 보다는 다수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생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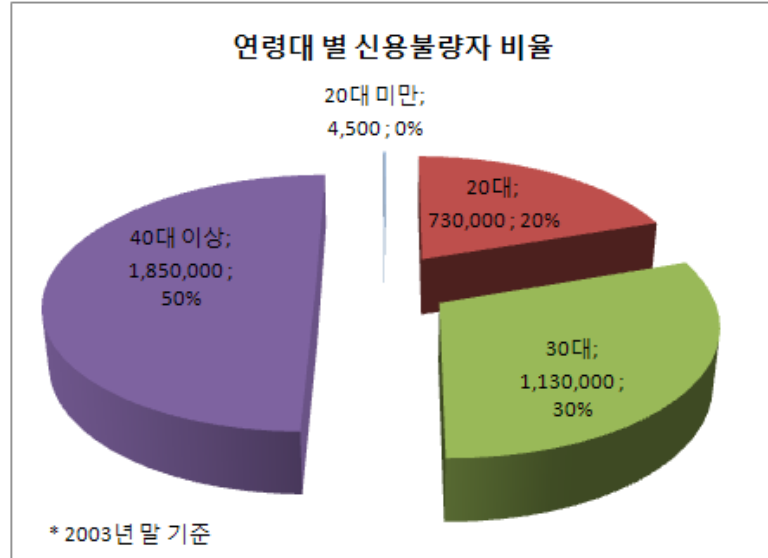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신용 불량자들이 순식간에 늘어난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말까지 짧은 기간에 신용 불량자가 추가로 15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2003년 1년 동안에만 120만 명이 늘어나 372만 신용 불량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그림 참조)

급증한 신용불량자가 거의 신용카드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2003년에 새로 신용 불량자가 된 120만 명 가운데 90만 명 이상이 신용카드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0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 불량자 372만 가운데 64.4퍼센트인 240만 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신용사회 창출을 목적으로 했던 신용카드가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도구로 변신한 것이다.²⁾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신용카드로 생긴 신용 불량자가 상당수 취약 계층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20대 청년, 1천만원 미만 소액 신용 불량자가 많다는 사실에서 간접 입증된다.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20대 청년 신용 불량자는 2001년 말 16.7퍼센트에서 2003년 말 20퍼센트가 넘으면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1천만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2)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2004.4

사람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된 이후 어떤 생활을 했겠는지 짐작을 하기도 어렵다.³⁾



신용카드 대란 이후 신용 불량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2004년 362만, 2005년 297만, 2006년 280만 명으로 그 수자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왔다.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이른바 ‘금융 소외자’는 2007년까지 750만 명 수준, 2008년 말 기준으로는 816만 명으로 추산된다.⁵⁾ 경제활동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에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는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일상생활 속에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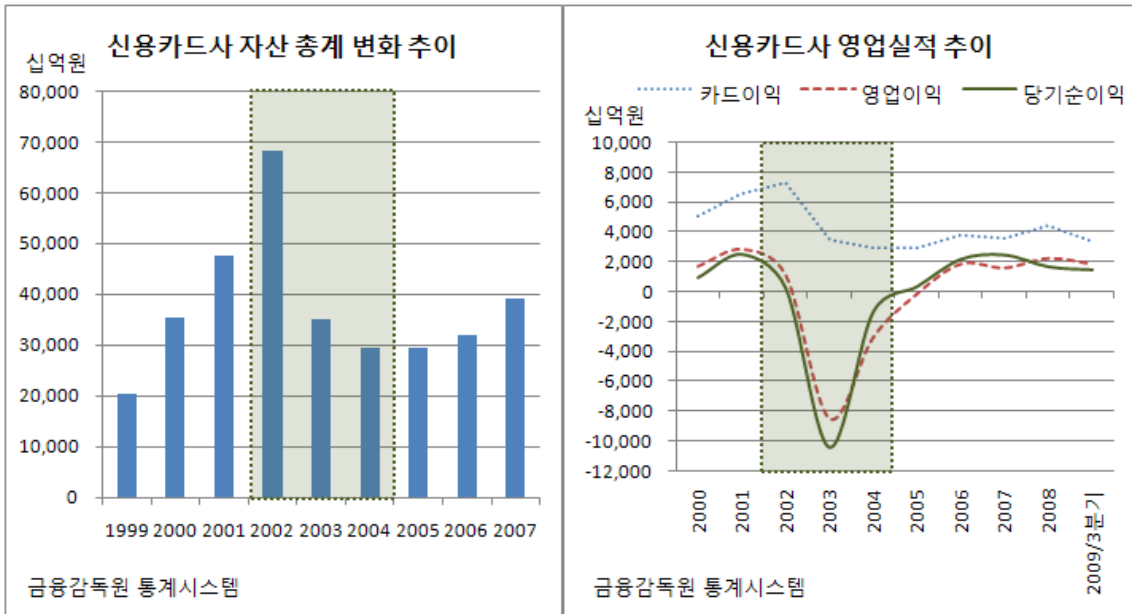
무분별한 영업행위는 신용카드사 부실로 되 돌아오다.

신용카드 시장이라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팽창과 신용카드사들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 돌아왔다. 연체율이 급등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는데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흑자행진을 이어오던 신용카드사들은 2002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무려 10조원의 당기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행진은 2004년까지 이어진다. 이들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2005

3) 한국개발연구원, “신용 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2003.8
 4) 연합뉴스 2007.3.1
 5) 경향신문 2009.8.4

년 이후의 일이다.(그림 참조)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자본 건전성 확충으로 영업이 위축되었음은 물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채권 회수가 안 되는 동시에, 2003년부터 자본시장에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가 전혀 소화가 되지 않자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부실이 표면화된다. 그 정점에 당시 업계 1위의 엘지 카드사가 있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 1위, 개인카드 발급 수 2250만개로 1위, 카드 이용실적 1위의 업체인 엘지카드사는 삼성카드와 함께 당시 과잉 경쟁을 선도했던 대표적인 재벌 계열 전업 카드사였다. 1988년을 전후하여 카드 사업에 진출, 신용카드 시장을 팽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재벌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이 2000년 신용카드 경쟁에도 최전선에 섰던 것이다.⁶⁾

삼성카드와 치열한 선두다툼을 하면서 과잉경쟁을 벌였던 엘지카드사는 2003년 전체 신용카드사 손실 10조 원 가운데 5조 6천억을 떠안았고 결국 2003년 11월, 엘지카드사의 계좌 잔액 부족으로 고객들의 현금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다. 엘지카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엘지카드사는 2003년 11월 채권 은행들이 약 2조 원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다수 은행들이 대출금을 출자전환 하는 등 지루한 과정을 거쳐 결국 2004년 연말에 가서야 채권단과 엘지그룹이 1조원의 증자 합의로 일차 매듭지어진다. 이후 2007년 10월,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신한

6) 금융감독원, “200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2003.2

카드가 엘지카드를 인수 합병 함으로써 최종 정리된다.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엘지카드 사태이후 신용카드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당시 출혈 경쟁을 선도하며 2002년까지 시장 점유율 73퍼센트를 장악했던 전업카드사(주로 재벌 계열)들은 엘지카드 사태이후 급격히 위축되거나 국민카드와 외환카드처럼 아예 은행으로 재 흡수되면서 위상이 약화되어 2009년 9월 현재 점유율이 48.2퍼센트 정도로 줄었다.⁷⁾

또한 카드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었던 현금 대출(현금 서비스와 카드로론) 비중은 당시 64퍼센트를 넘다가 2009년 9월 기준으로 21.9퍼센트 밖에 안 될 정도로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물론 현금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게 된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수익, 특히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고자 집중했고 이는 자영업과 같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 집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은행에서 카드사가 분리되어 전업카드사로 출범하고 특히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이동 통신사와 결합하면서 소매 영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하나은행에서 분리된 하나카드사가 SK텔레콤과 협력하여 최근 하나SK카드를 출범시키고 비씨카드에 KT가 자본참여를 한 사례가 그것이다. 또한 최근 다시 현금 대출을 늘리고 있는 점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이들이 2010년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는 금융위기의 예선전?

지금까지 2002~2003년 동안 370만 인구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수많은 가정을 파산지경으로 내몰았던 신용카드 부실사태의 전개과정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당시에 나온 대부분의 연구 자료나 평가 자료들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국민들의 ‘과도한 소비 욕구’나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영업행위’, 또는 ‘적절한 신용평가 시스템 부재’를 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대체 정부와 재벌 계열 신용카드사들이라고 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 협력하여 온갖 신문과 방송매체를 앞세워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퍼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연구자들이나 평가자들 자신들은 얼마나 그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는지는 사실 논의할 가치도 없다.

7) 한국금융 2010.1.25

또한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영업행위나 선진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에 선진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배우라고 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미국은 그렇다면 어째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을까. 세계 최첨단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 증권에 최고의 등급을 매기면서 금융위기를 자초했는지를 상기한다면 이 또한 너무 안이한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금융위기 원인을 진단하면서 단지 ‘금융회사의 무리한 탐욕’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신용 평가의 부실’ 때문이라고 한다면 누가 공감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시장 자율로는 통제 불가능한 금융의 자기 팽창 속성에 대해 원천적인 규제가 있어야 했다. 또한 금융이 왜 수익산업이 아니라 공공산업이어야 하는지를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실 사례로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덧붙여 둔다면 어찌면 2003년 가계의 신용카드 부실 사태는 일종의 예선전에 불과했을 수 있다.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핵심 금융회사에서 터진 부실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에서 터진 부실이었고,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절대 규모는 크지 않았던 신용대출 부실이었으며 중산층과 30,40대 주력계층에서 폭발된 부실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터진 부실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 대출이 빠르게 풀려나갔고 신용카드 시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도 급팽창했다. 다만 신용카드 시장이 그 고유의 취약성 때문에 쉽게 폭발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누적된 주택담보 대출은 이후 2005~2006년을 경과하면서 다시 누적되었고 꾸준히 팽창해온 가계 대출이 지난해 말까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따라서 2010년 오늘 시점에서 걱정하고 있는 가계 대출 부실 위험은 이미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예선전이 아니라 본선 게임이다. 은행과 연관된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실, 그리고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가계 부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만큼 쉽게 터지지는 않겠지만 심각성 정도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종합 대책”, 2002.5
금융감독원,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8
한국은행, “가계 신용동향” 2001~2004년도 각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2004.4
한국금융연구원,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2004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2003.8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2002.2
삼성경제연구소,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 2003.12
엘지경제연구원,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2003.4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